

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

"10년 정도의 중·장기 계획세워야"

김수미 , 2009-07-07 오후 5:56:06



- 7일 충북경실련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내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 상인들이 홈플러스 24시간 영업과 SSM 출점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.

© 김태훈 기자

충북문화재단이 민간 주도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예술진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과 투명한 운영방안 등 최소 10년간의 중·장기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7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(마지막) 공청회에서 김희식(청주 흥덕문화의 집) 관장은 "전문가 중심의 기구는 인적구성이 중요한데 현재의 5~6명 인원은 업무에 한계가 있어 운영비를 충원해서라도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이에 박성수(충북도 문화예술과) 과장은 "재단 기금에서 출연되는 150억원의 이자 수익과 3억원 이외에도 추진비가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"고 답변했다.

이상훈(충북지역개발) 회장은 "수요자들이 문예진흥기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어야 하고 예술가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메세나 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이어 임승빈(청주대) 교수는 "명칭에 따라 그릇에 담기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북문화예술재단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임병무(청주문화의집) 관장은 "문예진흥기금 150억원에 도내 각 시·군에서 5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200억원의 기금에 연 3억원로 2012년까지 운영하고 난 이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"며 "최소 10년 정도의 중·장기 계획을 세워 자립방안과 대안, 운영방안을 논의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이에 강태재(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) 공동대표는 "조성된 기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2012년 후 자립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"고 말했다.

공청회에는 강태재 충북문화재단 설립 자문위원장이 진행을 맡았고 장현석(충북문화원장) 부위원장과 김승환(충북문화예술연구소장), 문상욱(충북예총회장), 박종관(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), 정상용(충북예총 사무처장), 추연집(충북문화원 사무처장) 위원이 참여했다.

/ 김수미기자